"경찰 통제 시도, 자치경찰제 흔드는 꼴"

행안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제출
"실질적 지휘·감독권 없다" 내용 담겨

경찰 "통제력을 갖기 위한 수단" 주장
맞춤형 치안 서비스 '유명무실' 제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경찰 정책을 선정하는 모습.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공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시도할 경우 효율성 논란이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유명무실' 해져 경찰의 중점 과제인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는 해당 연구를 국내·외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해 국내 경찰 제도와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행안부 장관은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밝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자치경찰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지역에 맞는 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됐다.

자치 분권에 따라 지역 현황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자체가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지만, 인사 및 예산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정부가 아무런 계획을 시도하지 않아 정부가 사실상 자치경찰 제도 개선 및 강화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자치경찰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방치하는 것이며, 결국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자치경찰의 약화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작 자치경찰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 자치경찰이 유명무실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이 강화되면 지역이 아닌 중앙의 입맛에 맞는 치안 정책이 실행될 것"이라며 "지역 특징에 맞는 자치경찰의 치안 서비스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박진석 기자

사이버도박 빠져드는 청소년… 9살 초등생도 적발

경찰청, 청소년 포함 2925명 '검거'
10대가 직접 총책 맡고 서버 개설
친구 소개·스마트폰 메시지 등 유입

경찰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논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됐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가 1012명으로 전체의 97.8%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서버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이 12명, 도박사이트 광고가 6명, 대포물건 제공이 5명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이 2명 포함됐으며, 최저 연령은 1만 원으로 도박을 한 9세였다.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한 수단으로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가 꼽혔다.

이번 단속에선 단순히 도박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부터 두바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운영자 수준으로 고용한 사건을 수사해 청소년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와 재활,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다"며 "가정과 학교, 인터넷 사업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지난 24일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에서 광역물자센터 개소식이 열린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 더 빠른 재난사고 대응력 갖춘다

부천소방 119센터에 광역물센터 개소
소화제·염화칼슘 등 소모품 대량 비축

경기도 소방이 대형재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소모품을 대량으로 비축해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에 광역물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역물자센터는 재난 대응 소모품과 감염병 대비 구급물품,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을 비축하는 장소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폼소화제 등 소화 물품부터 겨울철 도로 빙결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예방에 필요한 염화칼슘 등 각종 재난 대비 소모품이 저장된다.

대형재난 사고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사고 현장보다 투입되는 소방 장비가 많아 광역물자센터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장소로 꼽힌다.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 대형화재 사고 당시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제 약 2만L가 소모됐으나, 경기도내 35개 소방서와 각 기관의 보유량을 모두 동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대응 소모품을 미리 비축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투입해 대응함으로써 재난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광역물자센터 개소로 도소방재난본부는 지역 안전 강화에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형재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진행된 광역물자센터 개소식에는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유경현 도의원, 김성철 생명문화운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석 기자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아픔을 치유해드립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심리적 안정과 관계개선 안정 등 도모

수원중부경찰서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중부서는 25일 수원시공업녹지사업소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시공업녹지사업소의 목공 체험 및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피해자 간 관계개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이 외에도 전문 경찰관의 상담 및 범죄예방 교육도 병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숲 체험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의 25개 관찰원에서 각종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목공 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관계 개선 후 화해의 의미로 직접 목공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중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들를 적극 모집하는 한편, 시공원녹지사업소는 참가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격리 대신 화해로 더 큰 피해 회복 효과가 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협약식을 통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성덕 시공업녹지사업소 소장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치유를 위해 힘을 합쳐 돕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